
문서번호 : 18-2-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2
수 신 : 각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제 목 :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8. 2. 8. (목)
전송매수 : 총 6 매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 2월 8일,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이하 ‘종업원들’이라고 합니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국가정보원은 종업원들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나, 종업원들은 2016년 4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부와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종업원들은 국가정보원의 감시와 통제 하에 자유로운 거주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현재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입니다.
4. 이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에 대한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과 함께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 공동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목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 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8. 2. 8.(목) 오전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 순서

- ▶ 사회 : 장경욱 변호사(민변TF 팀장)
- ▶ 발언1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구제조치에 나서라!(진정서제출 취지 등) - 민변TF
- ▶ 발언2 : 12명 종업원 문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원상회복 - 대책회의(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 발언3 : 사실상 강제억류중인 김련희씨를 송환하라! - 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촉구모임(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
- ▶ 기자회견문 낭독 : 민변TF
- ▶ 질의응답

※ 기자회견 이후 민변 진정서 제출과 3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 첨부문서

1. 기자회견문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2018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첨부1-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억류 중인 북녘 동포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조치에 나서라! -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진정서 제출에 부처-

오늘 민변 변호사들은 북측 부모들이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제 이들 종업원들 문제는 더 이상은 문제해결을 지체할 수 없는 국내외 이슈로 부상한 심각한 인도주의의 문제요, 인권의 문제가 되었다. 지난 1월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북측이 이들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혀 향후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상에서 이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첨예한 쟁점으로도 부상하였다.

지금껏 정부는 이들 종업원들이 자의로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한국사회에서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총선용 북풍몰이와 국정원에 의한 기획탈북 의혹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한 적이 없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이들의 안위와 이들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신뢰할만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다.

정부 주장과 달리 이들 종업원들이 국정원과 지배인의 공모에 의해 속아서 한국에 강제적으로 입국하여 국정원에 의해 외부와 어떠한 연락도 접촉도 할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 통제를 받는 가운데 북측 부모 형제들과 생이별을 강요당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는 중대범죄로 엄히 처벌될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입국경위와 현재 신변과 안위에 대한 정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간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이들 종업원들이 강제 억류 상태에 있다는 의혹을 기정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2016년 4월, 입국 이후 현재까지 종업원들에 대한 외부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 상태로 이들은 국가정보원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 2년여의 시간동안 가족들과 서로 안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종업원들 부모의 대리인으로서 민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각종 의혹은 커져만 가고 심지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생겼다.

오해아 키타나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열린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이들 종업

원들이 한국행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유엔 관련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한국 정부의 설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사안을 계속 조사 중에 있고, 지난 1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4월 총선 직전 이뤄진 통일부의 이들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 발표도 박근혜 정권 당시 권력구조상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휘둘러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커져만 가고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진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동시에 생이별의 고통은 더해가고 있다.

이들 종업원들의 신변과 안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한 국내외의 각종 인권구제 절차(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준항고, 변호인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UN 긴급청원 및 개인진정 등)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다.

새 정부에 기대를 갖고 이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들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이 사건의 기획탈북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와 외교관계를 이유로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상대상에서 이 문제를 제외하였다.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이 겪고 있는 이산의 고통을 덜고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자 새로 임명된 국정원·통일부·경찰청·대한적십자사 회장 등과의 면담도 어떠한 결실도 얻지 못한 채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었다. 오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이들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하여 이들 종업원들과 가족들의 인권침해와 이산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행사하여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대면조사를 비롯한 인권침해 구제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촉구모임

[첨부2-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1) 진정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변호사들

2) 피진정인 : 국가정보원장, 통일부장관, 경찰청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결정, 정착지원, 신변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에 해당함)

3) 진정취지: 12명의 종업원들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피진정인들의 감시 및 관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하고,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라.

4) 진정의 요지

① 2016. 4. 8. 통일부가 집단 입국사실을 발표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은 2018. 2.에 이르기까지 외부와 어떤 접촉도 불가능한 상태임. 집단 입국 시점이 총선 닷새 전이었다는 점,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직후 통일부가 긴급브리핑의 형식으로 이례적으로 발표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에서도 지적하였음.

② 집단 입국 사실이 알려진 후 종업원들 부모의 위임을 받은 진정인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종업원들에 대하여 여러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거부당하였고, 이후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소송),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당시 국정원장(이병호)에 대한 형사고발 등 국내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음. 2018. 2. 현재 모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각 절차의 내용은 다르지만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 “종업원들은 현재 자유로운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였고, 실제 종업원들의 신변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

③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각 담당자들과의 면담에서 서로 엇갈린 답변을 하였음.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이 퇴소한 후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일부는 종업원들이 특별보호 대상이어서 국정원의 관리 하에 있다고 하였으며, 경찰청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1년 동안 종업원들의 신변에 관한 보고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음. 국정원, 통일부는 종업원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나 실제 종업원들의 의사를 확인한 것인지 알 수 없고, 경찰청의 신변보호관들에 대한 면담신청은 ‘신변보호관들이 원하지 않는

다며 거부되고 있음. 현재 종업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실제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의 관리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④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종업원들을 직접 만났던 사람은 국정원 소속 인권보호관 뿐이었고, 가족들과 안부확인조차 할 없는 상황임.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들은 종업원들의 변호인으로서, 가족들의 대리인으로서 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음. 종업원들은 실질적으로 구금되고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를 받으면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음.

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다른 어떠한 고려 없이 현재 종업원들의 신변을 직접 종업원들을 만나서 확인하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종업원들이 이들의 통제와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함.

(끝)